

# 민주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 포기 예산안”

## 尹 정부 내년도 예산안 비판 금투세 폐지 등 세입기반 훼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미반영 “국회심사서 사업별 문제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

고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

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아울러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R&D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

안을 제출하는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안도걸 “대규모 세수결손시 추경편성 세출조정 의무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사진)은 27일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추경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세입감액과 세출조정을 하도록 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6월과 8월에 정부가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추계의 분석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과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실적과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대규모 세수오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8월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다음 연도 세수재



추계의 의무화했다.

또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 심사 및 확정권을 위반하는 정부의 독단적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대규모 세수결손시 세입정정추경안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신 세수실적과 경제지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박근택 “檢 특수활동비 삭감 조정·형사부 수당 전환 검토”

박근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26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 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검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



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 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비공식 파견 검사와 수사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을 대검찰청이 아닌 일선 현장으로 돌려보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78억9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 최지현 시의원,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발의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광산1·사진)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27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최 의원은 “광주시 일부 학교에서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세광학교 등 4개교의 창호 교체,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2개교의 냉난방기 교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음 저감과 환경 개선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전남중학교 등 13개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조례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신원식·김태호, 국회 운영위 출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뉴스

## 민주, 내달 9일 전남서 ‘세 과시’ 현장 최고위

### 이재명 2기 첫 방문·예산정책협의도 곡성·영광 재선거 겨냥 민심 파고들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오는 9월9일 전남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10·16 곡성·영광 재선거 승리를 위해 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당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달 9일 전남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가 8·18 전당대회

이후 지역에서 여는 첫 최고위원회의이다.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에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당 지도부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이 각 사·도와 만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통상 9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데, 당 지도부는 올해 첫 방문지로 전남을 선택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를 약속하며 지역 민심에 다가갈 것으로 보

인다.

이같은 행보는 10·16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 ‘민주당 일당 독재’와 ‘당 지도부에 광주·전남 부재’ 등을 파고들며 재보선 총력전에 돌입하자,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남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닷새 만에 퇴원… 오늘 복귀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오늘 낮 12시30분께 퇴원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 주제로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의 주제를 시작으로 여섯 만에 당무에 복귀한다.

미뤄졌던 주요 일정들도 순차적으로 재

개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다.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는 전날 실무협에서 추석 전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 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의결… 오늘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넘어온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다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6년에 걸쳐 이재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